

한국의 이민통합기금 톨킷 구축에 관한 연구*

-해외 이민통합기금 정책의 경험을 중심으로-

권영은
(화신사이버대)

1. 서론
2. 한국의 이민통합기금 현황
 - 2.1. 이민통합기금 도입 논의
 - 2.2. 이민통합기금 법개정 논의
3. 해외 이민통합기금 정책의 경험
 - 3.1. 유럽연합, 미국, 대만의 이민통합기금 정책 경험
4. 이민통합기금 톨킷 구축 방안
5.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이민통합기금 필요성 및 그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해외 이민 통합 정책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의 상황에 맞춘 이민통합기금 톨킷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른 연구의 범위를 유럽연합, 미국, 대만의 이민통합기금에 관한 기존 연구에 기초하여 한국에서 단계적 이민통합기금 방안을 비교하였다. 이와 같이 유럽연합, 미국, 대만의 성공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이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3S1A5B5A17089329).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이민통합기금의 도입으로 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고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제에 이민통합기금, 톨킷, 한국, 유럽, 미국, 대만, 해외 이민통합기금, 정책

1. 서론

최근 법무부는 체류이민자 300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신(新)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하였다(법무부, 2024)¹⁾ 새로운 이민정책은 선제적 우수인재 유치를 통해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유입선별과 통합 촉진을 통해 국민의 일자리 보호 및 사회 갈등을 예방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른 이민자 사회통합의 강화 측면에서 이민자 사회통합기금 신설 증장기 검토도 주요 정책 과제로 두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제는 지난 2018년 8월 24일 정성호 의원 등이 이민통합기금 조성과 운영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재한이민자처우기본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또한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이민자정책의 성격을 고려하여 특정 중앙부처 산하에 기금 운용심의회를 신설하거나 국무총리 산하의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이민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한국도 이민자가 부담한 각종 비용을 사회통합에 직접 활용함으로써 자국민의 적대적 감정을 해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기금운용은 한국의 거주 이민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회통합에 필요한 재원을 실효적 및 안정적

1) 법무부는 2024년 9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체류이민자 300만 시대를 대비하여 4가지 주요 정책을 발표하였다. 첫째, 우수인재 유치로 톱티어(Top-Tier) 비자, 청년드림 비자 등 새로운 비자 제도를 통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우수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한다. 둘째, 지자체·민간 참여 확대로 광역형 비자 도입, 지역특화형 비자 및 농·어업 계절근로자 제도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한다. 셋째, 사회통합 강화로 이민 2세대 자립 지원과 맞춤형 사회통합교육, 통합정책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회통합 촉진 및 갈등 방지이다. 넷째, 과학적 도입관리로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통해 국민 일자리 침해 예방 및 선별 유입, 비자 심사 인프라 강화 및 입국 전 검증을 강화한다(법무부 보도자료, 2024).

인 확보 차원에서도 효과적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사회통합과 연계선상에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 미국, 대만의 이민통합기금에 관한 기존 연구에 기초하여 한국에서 단계적 이민통합기금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기초하여 정책적 측면에서 증거기반 이민통합기금 툴킷(toolkit)²⁾ 구축 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Europe MPI, 2023).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이민통합기금의 설치, 조성,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한국의 이민통합기금 현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해외 주요 이민선진국의 이민통합기금 정책의 경험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한국의 이민통합기금 툴킷 구축은 어떠한가?

2. 한국의 이민통합기금 현황

글로벌다문화 사회 가속화에 따른 세계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WTO의 다자간협상을 통해 무역자유화에 따라 더 빠르게 시장이 개방되고 있다. 상호이익을 얻고자 하는 경제블록화가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이민자의 이동 또한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은 초저출산 초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하여 생산가능 인력 부족이 심각한 현실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게다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북한이탈주민, 중국과 구소련의 재외동포, 아세안 국가와의 관계 등으로 인구이동이 필연적이므로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K-pop 등 한국의 문화 열풍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국제협력이 진전됨에 따라 이민자

2) 툴킷은 tool과 kit의 합성어로 이루어진 용어로, 1963년 Toolkit으로 사용되었다. 툴킷은 명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의미하는 바는 '함께 또는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일련의 도구'로 정의되며, 최근에는 의미가 더욱 확장되어 '작업을 돕는 일련의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들, 키트라 작성된 일련의 과정을 위한 도구'로 정의되고 있다(임원준, 2021).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민통합기금 정책 시행도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1. 이민통합기금 도입 논의

2021년 이민자정책의 간사부처인 법무부에서는 ‘외국인정보 빅데이터 과’를 조직 내에 신설하였다. 이에 향후 이민자정보에 관한 각종 정보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축적되고, 분류되어 증거기반의 정책수립과 평가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법무부 출입국이민자정책본부, 2021).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이민자의 실업율, 불법체류이민자 증가 등 산재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 단계에서 이민자 정책 수립과 평가에 당면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범적 분석의 연구 또한 필요하다(법무부 제4차 이민자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2022). 이민통합기금 도입 과정은 수익자부담의 대상인 이민자들의 인식이 포함되어야 하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단순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비교 연구로 제시하고 있다.

〈표 1〉 이민자 고용지표 (단위: 천명, %, %p)

		상주 인구	경제 활동 인구		비경제 활동 인구		고용률	실업률	
			취업 자	실업 자	경제 활동 참가율				
이민자 체류	2021. 5.	1,331.8	909.6	855.3	54.3	422.2	68.3	64.2	6.0
	2022. 5.	1,301.9	879.9	843.0	36.8	422.1	67.6	64.8	4.2
실태 및 고용 조사	전년대 비증감	-29.9	-29.7	-12.3	-17.5	-0.1	-0.7	0.6	-1.8
	증감률	-2.2	-3.3	-1.4	-32.2	0.0	-	-	-

출처: 2022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p6 인용

2021년 5월 당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주관한 이민정책 관련 학회 전문가들과 개최한 간담회에서 “중장기 이민자정책 및 사회통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이민자가 납부한 수수료 등을 기반으로 이민통합기금을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EKW이코리아월드, 2021). 이러한 제안은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에 논쟁이 되었던 지원금 등에서 국민세금으로 이민자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발생하였던 것에서도 기인할 수가 있다. 이에 이민자가 부담한 각종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삼아 이민통합기금 조성을 하면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는 기폭제로서 사회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일환으로 이민자는 일방적 지원대상이라는 일각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유료화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2023. 12월 신설)의 근거법령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현행 무료로 제공하는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비용을 일부 유료화하여 시행할 예정이다(법무부 보도자료, 2024).³⁾ 이러한 유료화는 그간 무료로 교육을 제공함에 따라 참여자 학습동기 및 학업성취도 저하 등 부작용도 배경이 되었다. 특히 재외동포, 이민자 취업인력, 유학생 등 교육대상이 다양화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 재정 투입의 한계로 과정 개설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앞의 법무부 사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의 다문화사회에서 요구되는 이민통합기금의 신설과 추진 정책의 적극적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⁴⁾ 이민통합기금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라휘문(2021)은 이민통합기금의 설치와 관리운영 대안에 대해 논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수익자부담

3)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부 유료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납부대상은 사회통합프로그램 1~5단계 참여자, 납부금액은 각 단계별(1단계 당 100시간)로 10만원으로 이 금액은 이민자에 대한 사회통합교육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공익적 성격도 있음을 감안하여 교육원가의 20%를 부담토록 한다(1시간당 1,000원). 감면대상으로 국익 기여자, 사회적 약자는 교육비용 면제, 교육 성실 참여자는 교육비용 50%감경(50,000원)이다. 감면대상 세부사항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교육 수수료 고시(안)을 참조하기 바란다(법무부 보도자료, 2024).

4) 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정책사업 등 특정 부문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려고 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수반되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설치하고 있다. 기금으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①특정한 목적 ②특정한 재원 ③자금의 신속적 운용이라는 세 가지 특성을 가져야 한다. 이민통합기금에 관한 논의는 대체로 ‘이민자’이 납부한 수수료, 과태료, 범칙금 등의 재원을 통해(특정 재원), 재한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 통합 및 효율적 관리(특정 목적의 사업)에 활용하는 것으로 주장되어왔다(유은미 외, 2022).

원칙이라는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였다. 또한 설동훈(2015)은 이민자 유입 기간이 장기화되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민자 관련 기금에 대해 유럽연합, 미국 이민자 관련법 집행예산을 과태료와 수수료 통합 충당 방식 및 대만의 취업안정기금제도 등을 다루었다. 김종세(2021)는 이민기금은 이민자 관련 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통일적 지원을 가능케 함으로써 각 부처의 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일회성이나 중복성 문제를 해소하고, 이민자가 부담한 각종 비용을 사회통합에 직접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반감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은 중요한 이민정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이민자에게 단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이민통합기금 설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과 수입 지출규모에 대한 정확한 추계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한국은 1980년대 말을 기점으로 체류이민자 환경이 급격히 변함에 따라 이민자 사회통합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대외적으로는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난민, 외국인유학생, 그리고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등에 대한 정책이 강화 또는 완화를 병행하는 차원에서 이민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이민자의 유입과 정착은 글로벌다문화 사회로의 도약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제노포비아 확산 등으로 한국의 사회통합에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또한 외국인정책기본계획,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대학의 이민 관련 전공 개설 등의 이민자에 대한 정책 시행에 힘입어 일반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는 비율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의 정부 부처는 이에 따라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또한 이민자들은 한국에서 장기적인 정착 비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한국어토픽 자격증 취득 등 한국사회의 이민정책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도 가칭 이민청 설립 추진 및 재외동포청(2023년 설립) 등 다문화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다양한 협력공동체 결성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 부처간 이민자와 관련한 정책 추진 및 발전단계의 규모에서 차이가 크고 정부 부처간 업무 성격에 따라 정책 협조의 어려움으로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주체가 형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2018년 이슈가 되었던 예멘 난민, 아프가니스탄 난민 유입에서

이질적 종교, 문화 배경 등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불안감과 우려가 확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확산은 그들에 대한 지원이 막대한 세금 낭비인가 하는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감 또한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여러 정황상 한국에서도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민자통합기금의 형성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졌다. 이민자통합기금에 관한 연구는(이혜경, 2009, 2019; 설동훈, 2010; 전주상, 2012; 김정순, 2013; 한국법제연구원, 2014; 김종세, 2019, 2021; 라휘문 2019, 2021) 등에 불과하다. 정부차원에서도 이민자정책기본계획 등, 한국의 전체 구성원 사회통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오고 있으나, 이민통합기금 관련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민통합기금은 이민정책의 하나로 국제사회의 영향이 강하여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예멘난민 입국, 아프가니스탄 출신 특별기여자 입국,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 제한 등과 같은 복잡다단한 양상을 띄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양상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민자의 유입 규모에 대한 선제적인 예측과 대비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른 이민통합기금의 또 다른 요건인 신속적 운영의 필요성의 충족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2.2. 이민통합기금 법개정 논의

서론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지난 2021년 당시 국회사무처는 정성호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재한이민자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 재한이민자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이민통합기금을 설치 및 조성하여 체류이민자의 원활한 국내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 의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50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였다. 이 의안은 이민통합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이민통합기금이 설립될 경우, 기금 특성에 따라 사업성기금으로 분류되는 것이 유력하며, 이민통합기금 설립 이후에는 국가재정법의 세부조항에 따라야 한다. 즉 이민기금에 대한 개별법 신설 및 기존 법률안에 새로운 조항 신

설 등의 입법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따라 동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관리 주체의 선정과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자산운용 전담부서 등의 세부 절차를 거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민통합기금에 대한 법개정은 다소 요원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민통합기금 설치의 필요성은 체류이민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내·외국인 사회통합 및 급증하는 정책수요의 증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민통합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마련하여 국민의 세금이 가중될 경우 국민들의 반감에 따른 사회갈등이 야기되므로, 이민통합기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의 <표 2>는 이민기금 설치의 법제도적 타당성을 분석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이민통합기금 설치 및 존치 기준 검토결과

기금신선 운용 기준		검토 결과	비고
설치 타당성	기금의 재원과 목적 사업의긴밀한 연계	타당성높음	
	신축적 사업추진	타당성 높음	
	중·장기적 안정적 재원조달 및 사업추진	세부사항 보완 시 타당성 있음	중장기적 재원추계 보완
	기존 일반회계 및 기금사 업대비 신설한 기금의 효과적인 사업수행	타당성 높음	
	특정 세입으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여 일반회 계와 구분되는 회계처리	타당성 높음	
존치 가능성	개별사업의 적정성	세부조건 합의 시 타당성 있음	기금에 포함될 대상사업에 대한 합의 선행
	재원구조의 적정성	타당성 높음	
	기금존치의 타당성	세부조건 합의 시 타당성 있음	타 기금사업에 대한 이관 합의 선행

출처: 유인미 외(2022)의 연구에서 본 연구자 재구성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논의된 이민통합기금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이 매우 단편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추상적인 구호의 단계에 맞추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이민통합기금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한국에서 이민기금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정책 제언 및 설치 요건과 방향 등에 기초를 두었다. 그래서 단순히 외국의 이민통합기금의 설치 가능성이나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이민통합기금에 따른 예상효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또한 외국의 사례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이 일부 논의되어 왔지만, 매우 기술적이고 단편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한국에서 이민통합기금 추진을 위해 해외의 사례 및 한국정부 부처의 정책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이민통합기금에 대해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

3. 해외 이민통합기금 정책의 경험

본 장에서는 해외의 이민통합기금 정책의 역사적 경험을 유럽연합, 미국, 대만으로 구분하여 다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궁극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민통합기금의 단계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해외 이민통합기금 정책 시행 지역과 한국간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환경도 상이하기 때문에 한국이 해외의 이민통합기금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민통합기금의 정책 도입을 통한 유럽연합 및 미국, 대만의 이민통합기금 형성은 현재까지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된 이민통합기금의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 대상 지역의 이민통합기금 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고찰은 한국의 이민통합기금 정책 추진에 시사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세 지역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3.1. 유럽연합, 미국, 대만의 이민통합기금 정책 경험

유럽연합은 과거 몇 십 년 동안 급격한 이민자 유입과 인구 변화에 직면해 왔다. 특히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의 난민과 이민자 유입이 두드러지며, 각국은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2024년 5월, 유럽연합은 새로운 이민 및 망명 법안을 통과시켜,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고,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협력 및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법안은 분쟁국가 출신의 망명 신청자를 위한 신속한 처리 절차를 도입하여, 최대 12주 내에 신청을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가족 단위로 수용되는 난민 관련 지원센터 등이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은 매년 최대 30,000명 정도의 망명 신청자를 수용하거나, 망명 신청자 한 명당 20,000유로의 기금을 지불해야 되며, 이는 회원국의 책임분담과도 관련성이 있다.

유럽연합의 이민통합기금 정책 경험은 양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1960년대 유럽연합경제공동체(EEC)가 결성되면서 1980년대 중반 이후 유럽연합이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한 차원 더 높은 경제통합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른 경쟁적 접근으로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남미경제공동체(MERCOSUR) 등이 결성되었다. 이후 1995년 WTO 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이민의 흐름도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이전 이민 과정은 주로 선진국으로 향하는 것이 이민 초점의 선입견이었다면, 현재는 송출국과 유입국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공식적인 협력이 상호간 경제를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WTO 회원국간 이해대립으로 무역자유화가 어려워지면서 경제적 이해를 같이 하는 국가간 지역무역협정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민은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유럽연합 내 이민의 가속화는 한 가지 측면만을 고려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제적 활동을 위한 합법적 이민 및 비합법적인 이민을 들 수 있다. 즉 노동력의 위치 변경으로 정의되는 이민인 생산 이동과 출발지역에서 도착지역까지 경제적 이

민에는 법적 경로를 통한 이주가 포함된다는 것이다(Bohning, 1981; Borjas, 1994). 세계은행에 따르면 합법적인 이주뿐만 아니라 서류 미비 등 비합법적인 이민자⁵⁾를 포함하여 약 2억 1,300여 명이 현재 출생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들의 이주에 대한 지배적인 이유가 경제적 요인에 해당된다는 것이다(The World Bank, 2010). 또한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강제적 측면의 이민자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제적 이주에 해당되는 이민자의 대다수는 출생국에서의 분쟁, 개발 프로젝트 및 자연 재해로 인해 자국의 국경을 넘는 것이 이민 방정식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처럼 다양한 배경으로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행위에 대해 국가는 그들의 국가를 보호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정책을 설정하여 주권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다(Spellman, 2008). 즉 국경을 넘어 목적국 국가로 진입하는 것은 이주가 물리적 배치뿐만 아니라 정치적 커뮤니티 등 국가의 구성원이 개인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정치적 측면에 해당된다(Jennica A Larrison, 2013).

특히 유럽연합⁶⁾은 이러한 이민의 가속화에 따라 유럽연합 차원의 이민망명정책 수립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제3국 이민자 통합기금(European Fund for the Integration of third-country nationals: EIF)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유럽연합난민기금(European Refugee Fund: ERF)과 유럽연합이민자귀환기금(European Return Fund: RF)을 운영하였다. 이 세 가지 기금이 합쳐져서 2014년 유럽연합 이민통합기금으로 변모되었으며, 공식 명칭은 비호, 이주 및 통합기금(Asylum, Migration and Integration Fund: AMIF)⁷⁾이다. 유럽연

5) 이민자는 합법적으로 국경을 넘을 수 있지만 방문 및 체류 등 이민자 개인의 법적지위에 허용된 할당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면 불법이 된다는 것이다. 이민자는 외국인과 귀화허가자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법무부 출입국·이민정책본부, 2022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p4 인용).

6) 창립일자는 1993년 11월 1일로 1952년 ECSC 창설국 6개국이 전신이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가 해당된다. 2020년 1월 영국이 탈퇴하였다(외교부 <https://www.mofa.go.kr>).

7) 비호, 이주 및 통합기금 AMIF는 본 연구에서는 이민통합기금으로 정의하였다. 이민통합기금의 목표는 Common European Asylum System의 설립 강화 및 개발(망명 우선권), 경제적, 사회적 필요에 따라 합법적 이주를 지원하고 제3국 국민의 효과적인

합 이민자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유럽연합 이민통합기금이 결성할 때부터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왔다. 이러한 이민통합기금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운영되었으며, 현재 2021년에서 2027년까지 이민통합기금이 운영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이민통합기금이 통합되어 운영되는 데에는 제3국에서 유럽연합 지역 내로 진입하려는 이민자와 비호신청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유럽연합은 이민자와 망명자 유입에 대해 효율적으로 채택함으로써 오랫동안 염원해 왔던 유럽연합 지역내 이민에 대응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러한 유럽연합 이민통합기금의 출범은 대내적으로는 ERF와 EIF의 지원을 받아 운영된 유럽연합 회원국의 이민자 및 망명자 관련 사업이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행정적 부담이 예산 규모에 비해 매우 높은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추진해 온 이민통합기금은 1994~1999년까지 유럽연합지역개발기금(ERDF)과 유럽연합사회기금(ESF) 등 다른 기금과 협력 체계를 가지지 않고 별개의 사업으로 운영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유럽연합 이민통합기금의 운영은 이민적 측면에서 완성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 이민통합기금은 회원국이 각자 추진하던 이민 망명정책을 유럽연합 차원의 공동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이 의의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회원국간 갈등을 정치·경제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 모범적 사례로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반면 유럽연합의 이민통합기금이 제3국 국민통합을 위한 기금이라면 영국은 이민조정기금의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영국은 일반세입 예산에서 이민자 일반지원금 연간 3,500만 파운드(523억원), 긴급지원금 4,000만 파운드(598억원)를 조성하여 이민자 관련 사업 및 불법이민 대처 등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다(라휘문, 2021). 2021~2027년 기간 이민통합기금 규모는 99억 유로에 이르며, 2014~2020년 기간의 31억 3,700만 유로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처럼 유럽연합의 이민통합기금은 공통적인 유럽 망명 정책을 강화하고, 유럽연합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요구에 맞춰

통합 촉진에 두고 있다.

합법적인 이주를 개발하고, 제3국 국민의 통합을 지원하고, 불법 이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유럽위원회, 2024). 이러한 정책은 한국의 이민통합기금 접근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미국의 증거기반 이민통합기금 정책 경험은 내국인과 이민자 간의 갈등, 역차별을 해소하거나 건전하고 안정적인 국가 사회통합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유입된 이민자에게 별도로 부과한 수수료 등을 활용하여 이민기금을 조성하고 있다(김중세, 2021). 그러나 2017년 출범한 트럼프 정부 시기에는 이민기금 지출 요청에 대한 자금 지원 거부로 이민 집행이 확립된 연방 정책에서 우선 순위 영역에 대한 협력을 제한하기도 하였다.

미국의 이민통합기금 정책은 다양하게 개발된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을 통해 이민자와 난민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특히 난민과 이민자들에게 초기 정착 지원과 지속적인 통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의 연방 난민 프로그램에서 이민자들이 직면한 경제적, 사회적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 지원과 기술 교육, 언어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이민자의 직업 능력 개발과 지역 사회와의 상호 작용을 촉진하는데, 특히 커뮤니티 조직과의 협력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정책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난민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통합프로그램이 주 정부 및 지역 기관과의 협력하에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난민의 지역사회 참여 증진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고용 지원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NAS(2015)의 연구에 따르면, 난민들은 초기 정착 단계에서 정부의 통합 지원을 통해 사회에 보다 쉽게 적응하며, 이후 자립을 이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 정책은 또한 지역사회와의 관계 구축을 중시하여,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이민자에 대한 지원기금은 미국 이민국적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에서 수익자부담원칙⁸⁾을 적용하여 이민

8) 수익자부담원칙이란 공공시설을 통해 편익을 받는 사람들이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

관련 행정 비용의 일부로 조달하고 있다. 즉 이민심사수수료제정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영주권 신청, 갱신 수수료 수입 등을 행정비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2022년도 회계연도 시민권 및 통합기금프로그램에 따르면, 시민권 및 통합기금은 이민자의 귀화를 준비하고 영어, 미국 역사 등에 대한 지식 제공 등 기여도가 있는 단체에 통합기금 제공 등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에는 약 2,200만 달러가 65개 단체에 지원되었으며, 취약계층, 저소득층 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영어 학습, 미국 역사 및 시민 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USCIS: Fiscal Year 2022, 2023 Citizenship and Integration Grant Program). 이 프로그램은 혁신적 접근 방식을 강조하며, 지역 커뮤니티 기반 단체가 참여하여 이민자가 시민권을 취득하고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은 이민 집행과 관련하여 우선 순위 영역은 이민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중점으로 이민통합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기금 운영은 미국의 전체 이민자 통합 예산이 아니라, 불법체류이민자 단속 관련 비용 및 이민 및 국적 서비스 관련 비용에서 발생하는 과태료와 수수료 등을 통해서 일부 조달하는 방식으로 취한다.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 및 갱신 수수료 수입은 USCIS 예산의 약 20%를 넘어서고 있다(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2022).

대만의 증거기반 이민통합기금 정책 경험은 아시아지역에서 한국과 유사한 형태로 이민 유입 경험을 하고 있는 국가로서 한국에의 시사점은 매우 중요하다. 대만의 이민자를 관리하는 정부부처는 2014년에 명칭이 변경된 내정부이민서(內政部 移民署)⁹⁾가 총괄하고 있다. 1993년 7월 28일 제2900차 행정원 회의에서 ‘이민자 배우자 돌봄을 위한 기금 마련’에 관한 지시에 따라 1994년부터 이민자 배우자 돌봄 지도 기금이

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비용부담의 정도는 편익의 수혜 정도에 비례한다. 구체적으로는 당해 공익사업을 통해 특별한 편익을 받는 사람에게 그 수익의 범위 내에서 사업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이는 공공사업의 실시로 인한 이익을 공공부문으로 다시 환원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선계훈, 2016).

9) 本署自草創至設置，組織從入、出分管，軍、民分管，到統合「軍民入出境聯合審查處」，改為「入出境管理處」，再移隸「內政部警政署」；民國96年改制為「內政部入出國及移民署」，104年1月2日組織改造，更名「內政部移民署」，歷經五度變革(內政部移民署，2024)

설치되어 시행되고 있다(內政部移民署, 2024). 대만은 1990년대의 이민 개방정책으로 저숙련 이민자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ASEAN) 결혼이민자들이 저출산 감소를 보완하는 역할로서 새로운 인구 증가 원천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대만은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이민통합정책을 시행 중이며, 이러한 연계선상에서 신주민발전기금(新住民發展基金)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內政部移民署, 2024).¹⁰⁾ 대만의 이민자 유입은 결혼이민자를 제외하면 주로 미국, 일본 등지에서 온 영주 이민자들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지에서 오는 저숙련 노동자 유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유입과 정착의 현실에서 대만 정부는 이민통합기금의 한 형태로 취업서비스법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台灣勞動部, 2018).

한편 최근 대만에서 베트남 결혼이민자 출신 의원 등이 발의한 신주민기본법이 통과되었다. 2024년 7월 16일 통과된 이 법안은 신주민들이 대만의 언어, 문화,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가 상담, 의료 및 산모 건강 관리, 고용 권리 보호, 교육 및 문화적 역량 강화를 통해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FOCUS TAIWAN, 2024).¹¹⁾ 이처럼 대만은 이민자와 관련한 정책들이 이민통합기금 정책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간 시행된 대표적인 사업으로 ‘신주민 햇볕계획’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이는 대만 내 다문화 가정의 자녀 및 외국인배우자들에게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주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시행되며,

10) 본 연구에서는 대만의 신주민발전기금을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민통합기금으로 통칭하여 정의하고 있다. 臺灣的移民融入基金政策年表主要政策及法規主要內容 2005年: 設立新住民發展基金建立新住民支持基金, 提供結婚移民和勞工移的援助, 2010年: 推出移民社會融入計劃為新住民提供生活適應教育和語言支援項目, 2017年: 實施新住民基本法制定全面性法律保護新住民的權益和社會福利. 2021年: 強化新住民多元文化家庭支持項目擴大對多元文化家庭子女教育和社會適應支持, 2024年: 擴充新住民社會融入基金並引入評估系統設立評估系統, 以提升新住民的權益保護和社會融入成效(內政部移民署, 2024)

11) Taipei, July 17 (CNA) The Legislative Yuan has passed a new law focusing on new immigrants that will require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MOI) to set up a new administrative agency to help them deal with issues they face in adapting to life in Taiwan(FOCUS TAIWAN, 2024).

다문화 가족들이 지역 사회와 잘 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전문가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되지만, 각 지방과 중앙 간의 역할 분담 및 소통 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林書宇 외, 2021). 대만의 이민정책은 단기적으로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고 장기적으로 인구 구조 개선을 목표로 하는 동시에, 이민자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사회 전반의 다문화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대만의 이민정책 추진 원동력이 이민통합기금에 원천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대만은 향후 동남아시아 등 제한된 이민자를 두고서 인구학적, 경제적 등으로 한국과 경쟁하게 될 지역 중의 하나이다(강진규, 2023).

유럽연합, 미국, 대만은 이민자들이 직면하는 도전과 그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각기 다른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민자 통합 정책을 발전시켜 왔다. 유럽연합은 법적 구조와 협력 시스템을 통해 통합을 도모하고 있으며, 미국은 지역 사회 중심의 접근 방식을 통해 다문화사회를 구축하고 있다. 대만은 법적 구조와 정책 접근뿐만 아니라 중국 대륙과의 관계 등 지정학적인 복잡한 시스템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세 지역 모두 이민자 통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해외 이민통합기금 정책 경험 비교

항목	유럽연합	미국	대만	한국
정책적 목적	다문화 사회 구축 및 사회적 응집력 향상	이민자 적응 지원 및 경제적 자립 도모	이민자 권리 보호 및 사회적 적응 지원	이민자 사회통합 및 권익 보호 강화
이민통합기금 출처 및 구조	유럽연합(EU) 내 국가별 예산 및 민간 협력	연방 정부 주도로 지역 및 민간 기금과 협력	중앙정부 주도로 지역 자치체 지원 기금 포함	중앙정부 주도로 지자체와 협력

항목	유럽연합	미국	대만	한국
지원 프로그램	언어 교육, 직업 훈련, 지역사회 통합 프로젝트	시민권 교육, 직업 기술 훈련, 건강 및 법률 지원	언어 교육, 생활 적응 교육, 다국어 상담 서비스 제공	언어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 필요
성과 평가 방식	통계적 분석과 사례 연구를 통해 성과 측정	정량적 평가(고용률, 교육 성과) 및 설문 조사	기초 통계 수치 기반 성과 평가 및 커뮤니티 피드백	정량적 성과 평가 도입 필요
주요 법적 근거	통합 기금 규정 (예: AMIF)	이민법, 사회복지법 등 다수의 관련 법률	신이민자 권리 보호법 및 관련 법률	이민자 보호법의 강화 필요에 의한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 이민통합기금 개정 필요

출처: 3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 구성

위의 <표 3>에서처럼 주요 법적 근거에서 유럽연합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으로서 이민통합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은 정량적 성과 평가 도입 및 민간 및 지역사회의 협력 필요를 기초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만은 언어 교육 및 상담 서비스 확대,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대응으로 이민통합기금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시사점은 이민통합을 위해 이민자보호법의 강화 필요에 의한 재한이민자 처우기본법 이민통합기금 개정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4. 이민통합기금 틀킷 구축 방안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연합과 미국, 대만의 이민통합기금 정책 경험에서 한국의 이민통합기금 틀킷 구축에 대한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에서 제공하는 지침이 국가별 이민통합 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유럽연합의 공동

연구센터(JRC)는 정책결정과 과학적 연구의 연결을 강화하며, 특히 이민 통합기금 정책 과정에서 증거기반 정책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이 이민정책을 수립할 때 최신 연구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회원국 간 과학적 정보와 정책의 상호 작용을 증진시키고 있다. 유럽연합의 이민통합기금 정책은 각국의 이민정책 효과성을 모니터링 하는데 중점을 두며, 상호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 있다.

미국의 이민통합기금 정책 경험 사례는 이민자 초기 정착 지원에서 프로그램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민통합기금의 역할은 크다는 점이다. 한국 역시 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는 통합 기반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이민통합기금 정책의 본격적인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적 자립을 위한 언어 교육, 기술 훈련 등 지역사회 연계 활동 영역 확대를 위해 이민통합기금 설치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민통합기금의 정책적 운영은 지역 사회와의 협력 및 민관 협력을 통해 이민자들의 생활 안정과 장기적인 사회 통합을 도모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른 이민자들의 다양한 배경과 특성에 적합한 효과적인 이민통합 지원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도 이민자 유입의 증가에 따른 예방책으로 사회적 통합과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정책적 기반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만은 이민통합기금 정책에 따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이민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통합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 역시 정부 및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이민자와 그 자녀들의 교육, 언어 지원, 생활 적응 등을 돕는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국어 상담 서비스와 정보 제공 시스템을 확대해 이민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확대도 중요하다.

이와 같이 본 장에서는 해외 이민통합기금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이민통합기금 툴킷 구축에 대한 예측/모니터링,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예측/모니터링으로 이민통합기금은 한국사회에서 생경한 용어일 수 있으므로 어떤 것들을 예측하고, 그간 어떻게 해왔는지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이는 이민통합과 관련된 필요성을 사전에 분석하고, 데이터를 통해 이민자의 특성과 필요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강조하는 혁신적 시민권 통합 접근 방식처럼, 한국도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언어 및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다.

둘째, 예방 차원에서 이민통합 교육이나 체험 등으로 대비하는 체계적 시스템 구축이다. 예를 들어 이민자 맞춤형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 이민자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이다. 해외 이민통합기금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민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 협력할 때 효과가 크다. 한국도 지역별 이민자 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가 요구된다.

셋째, 대비는 어떤 위기 상황, 즉 코로나 19 팬데믹 같은 상황의 위기 시에 대비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비를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한이민자 처우 기본법에서의 이민통합기금 관련 조항의 개정의 필요성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위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법 개정을 포함한 유연한 정책적 대응의 준비이다. 융합형 기금 조성의 형태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금을 조성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대응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갈등과 통합이 구분되므로 이러한 대응 시스템의 구축이다. 갈등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 통합을 위한 체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이민자와 국민 간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 우선 지원 차원에서 원격 지역 및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결혼 이민자, 고령 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복구는 대응을 슬기롭게 복구하였을 때, 이 사이클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모니터링하면서 이민통합 상황 진단 계획을 위한 설계 지원 구축이 요구된다. 즉 위기 상황 이후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피드백을 수집하고, 이를 통해 이민자 통합 상황을 개선하고 발전 방향성을 설정한

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USCIS의 기능과 유사한 이민통합기금 정책으로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위의 다섯 가지 방안을 기초로 한 이민통합기금 톨킷은 이민통합을 위한 계획 설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예를 들어 이민자 관련 예상 시나리오를 공유할 수 있고, 이전에 경험하였던 정책은 어떻게 극복하였는지에 대해 선례를 통한 피드백의 효과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이민통합기금 톨킷 구축은 어떤 업무로 무엇이 필요한지와 어떤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의 설계와 전반적인 이민통합의 피드백 시스템 구축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정책적 한계를 인지하고 단기적이면서 장기적인 이민통합의 발전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이민통합기금 톨킷 구축은 한국의 이민통합에 있어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이민자의 유입 증가에 따라, 이민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이민통합기금의 도입 필요성을 해외 사례를 들어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민통합기금은 이민자와 국민 간의 갈등을 줄이고,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기금은 이민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과태료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며, 이를 이민자 교육, 일자리 연계, 언어 교육 및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이민통합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다. 나아가 이민통합기금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유럽연합, 미국, 대만의 이민정책과 기금 운영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이민자들이 원활히 정착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고, 각 부처 간 협력과 역할을 조정하여 이민 통합을 위한 일관성 있는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은 이민통합기금 톨킷이라는 체계적 시스템을 통해 정책의 연속성과 효과성의 확보이다. 이민통합기금 톨킷은 예측, 예방, 대

비, 대응, 복구의 다섯 단계로 구성되며, 한국의 이민 통합 정책이 다방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해외 이민통합기금 정책 경험의 사례를 구체적 프로그램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향후 텍스트마이닝 등을 통해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방안을 후속연구에서 모색하여 보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의의는 이민통합기금 톨킷 구축 제언이 한국의 체계적인 이민통합을 이루어내고, 글로벌다문화 사회로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며, 인구감소 위기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인재(2004).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의 차이”, 한국행정연구원, 2004.
- 강진규(2023). <https://www.hankyung.com>
- 김정순(2013). “이민자 사회통합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
- 김종세(2011).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효율적 관리방안”,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42.
- 김종세(2019). “제한이민자처우기본법 이민기금 설치의 필요성”,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30(2).
- 김종세(2021). “이민기금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정책안”, 법과 정책연구, 21(1), 269-284쪽.
- 김준현(2014). “이민자 사회통합서비스 전달체계 비교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361-390쪽.
- 라휘문(2019). “이민통합기금에 대한 논의”,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35-250쪽.
- 라휘문(2021). “이민통합기금의 설치요건과 방향”, 다문화와 평화, 15(2), 86-112쪽.
- 박상원(2007). 수입자부담 원칙의 이해, 현안분석, 한국조세연구원.
- 법무부 출입국이민자정책본부(2022). 2022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1-113쪽.
- 법무부 출입국이민자정책본부(2023).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index.do>(2023.02.24. 14:32 검색).
- 법무부 출입국이민자정책본부(2021). “제4차 이민자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이민정책연구원.
- 법무부 보도자료(2024). “내년부터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부 유료화 시행: 이민자의 사회적 책무 강화”,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 10.2.(수), <https://www.moj.go.kr>.
- 선계훈(2016). “인천국제공항 테러방지 대책연구”, 경찰학논총, 11(2), 183-214쪽.
- 설동훈(2010). “이민자 사회통합 관련 기금제도의 국제비교”, 민족연구, (44), 145-160쪽.
- 유민이 외(2022). “이민기금 설계 유형별 재정규모 추산에 관한 연구”,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 이혜경(2009). “이민자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 효율화 방안”, 법무부.
- 임원준(2021). “주민참여형 CPTED 툴킷 개발에 관한 연구. 공공디자인연구, 1(1), 33-44쪽.
- 전주상(2012). “이민자정책의 재원조달체제 개선에 관한 연구: 기금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한국사회와행정연구, 23(1).
- 전채남 · 서일원(2013). “빅데이터 분석의 기술마케팅 활용에 관한 연구”, 마케팅 논집, 21(2), 181-203쪽.
- 정근하(2011). “텍스트마이닝과 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한 미래예측 방법 연구”, 한국과학기술 기획 평가원.
- 정연백, 문광민(2014). “기금제도의 개혁과정과 행위자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5(2).
- 정연호(2018). “재한이민자처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 한국법제연구원(2014). “이민자 사회통합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 Bohning, W. R. (1981). “Elements of a Theory of International Economic Migration to Industrial Nation States”, Global Trends in Migration, Staten Island, N.Y,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28-43쪽.
- Borjas, G. J. (1994). “The Economics of Immigration”,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2(4), 1667-1717쪽.
- EKWKoreaworld(2024). <https://www.ekw.co.kr>(2024.05.04. 14:00 검색).
- European Commission(2024). “EU funds supporting the integration of third-country nationals, 2021 - 2027”, <https://migrant-integration.ec.europa.eu>.
- FOCUS TAIWAN(2024). “New immigrant basic law passed, new agency to be set up”, FOCUS TAIWAN CNAdf ENGLISH NEWS, <https://focustaiwan.tw/politics/202407170012>.
- Jasmijn Sloopjes, Maria Belen Zanzuchi(2023). “Toolkit for Evidence-Informed Policymaking in Migrant Integration”, Europe MPI(Migration

- Policy Institute).
- Jennica A Larrison (2013). "Blueprinting Migration Analysis: Why Theoretical Application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re Not One-Size-Fits-All", Washington : University of George Washington.
- NAS (2015). "NAS: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 The Integration of Immigrants into American Society",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 Spellman. W. M. (2008). "Uncertain Identity: International Migration since 1945", Reaktion.
- The World Bank (2020). "International Migration and Development", International Migration and Development Retrieved April 9, 2020, from <http://econ.worldbank.org>.
-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2022). Fiscal Year 2022 Citizenship and Integration Grant Program, [https:// www.uscis.gov/citizenship-resource-center](https://www.uscis.gov/citizenship-resource-center).
- 林書宇, 吳庭芳(2021). 新住民社會融入政策與挑戰. 台灣社會科學研究.
- 內政部移民署(2024). 新住民多元文化支援方案與評估制度的發展. 行政院出版物.
- 台灣 勞動部.(2018). "Laws & Regulations Database of The Republic of China", Employment Service Act, Ministry of Labor.

필자 소개

성 명 권영은
소 속 화신사이버대학교
주 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191번길1(연산동)
전자우편 dkxpsp43@hanmail.net

Abstract

A Study on the Immigration and Integration Fund Toolkit in Korea - Lessons from the Experience of the International Migration and Integration Fund Policy -

Kwon, Young-eun
(Hwashin Cyber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highlight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n immigration integration fund in South Korea and propose practical methods for its development. Drawing on existing research regarding immigration integration funds in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States, and Taiwan, it examines these successful international cases and compares them to the context of South Korea. By analyzing these examples, the study identifies key insights that South Korea can adopt to create a phased immigration integration fund tailored to its specific needs. The proposed fund aims to support immigrants in adapting to Korean society more effectively while reducing social conflicts. By incorporating such a fund, the research explores strategies to foster smoother integration and mitigate challenges arising from immigration in South Korea.

[Key words] Migration Integration Fund, Toolkit, Korea, Europe, America, Taiwan, International Migration Integration Fund, Policy

투고일 2024. 10. 28 / 심사일 2024. 11. 20 / 게재확정일 2024. 11. 24